

토스, 인터넷뱅크 인가 앞두고 당국에 숙제 '토스'

금융혁신 모델로는 딱인데... 자본력이 걸림돌

금융위, 심사거처 내달 결과발표 토스 누적가입자 1000만명 넘어 국내외 벤처캐피탈 1340억 유치 VC 등 안정성 평가 엇갈릴 수도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예비 후보로 거론됐던 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금융 혁신과 안정성을 놓고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핀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토스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챌린저뱅크를 모델로 내세우며 혁신 이미지는 확실히 했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자신감을 표했지만 아직은 우려가 크다. 벤처캐피탈(VC)에 기댄 투자유치만 바라볼 수도 없고, 기존 주요 주주인 VC에 대해서도 당국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지도 가능하기 어렵다.

혁신성만 바라보거나 안정성이 아쉽고, 안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안 내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키움뱅크 (주주사 28개)	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 한국정보인증, 하나은행, SK텔레콤, 심일번가,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다프랜드, 프리미어 성장전략엔에이2호 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K증권, SBI AI&Blockchain Fund, 한국정보통신, 현대비에스앤씨, 아프리카티비, 데모데이, 에프엔가이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원투세엠, 투게더엠스, 바로고
토스뱅크 (주주사 8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빙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 : 이OO, 최OO, 황OO)

* 대부분의 신청서류가 미비되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후 보완이 되지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엔 금융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꺾인다. 토스가 금융당국에 큰 숙제를 던진 셈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은행 인가배점에 있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혁신성이다. 1000점 만점 중 350점이다.

토스는 이미 누적가입자가 1000만명

을 넘어선 핀테크 대표주자다. 지난해 국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모두 1340억 원을 유치하며 유니콘을 공식화한 첫 번째 핀테크 기업이다.

이와 함께 제시한 챌린저뱅크를 모델로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란 기존 인터넷은행과는 차별화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통해 은행업, 더 크게는 금융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에 맞을 수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지난해 28일 간담회를 갖고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 영

역에서 벗어난 챌린저뱅크가 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뱅킹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는 안정성에서 나온다. 혁신성 못지 않게 이번엔 추가 자금조달 방안 역시 배점이 높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가 대주주로 지분율 60.8%를 가져가며 ▲한화투자증권 9.9% ▲알토스벤처스 9% ▲굿워터캐피탈 9% ▲한국전자인증 4% ▲베스핀글로벌 4% ▲무신사 2% ▲리빙캐피탈 1.3% 등의 지분 투자로 주주 구성이 완성됐다.

예비인가가 평가항목 배점을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자본금 규모'는 60점에서 40점으로 감소한 반면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 등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은 기존 40점에서 60점으로 배점이 늘었다.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사업계획의 안정성'에 대한 배점은 기존 50점에서 100점으로 2배로 높아졌다.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 및 추가 자본조달에 대한 의지 등 평가항목에서 대주주 뿐 아니라 여타 참여주주도 유동성 공급에 동참하도록 하는 계약서나 확약서 등이 있을 경우 평가상 이점을 주기로 했다.

토스의 경우 주요 주주인 VC는 물론 추가 자본 유지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있다고 볼 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스가 60%가 넘는 지분을 가져가려면 금융주력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비금융주력자라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은 34%까지만 허용된다. 아직 여러가지 요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의 등장은 당국의 금융 혁신 의지를 위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흥행에 활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은행업의 국가 경제정책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주주구성이나 안정적인 자본조달력 비중을 낮춰 금융혁신이라는 목표만 보고 예비인가를 내주기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미세먼지 걷힌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1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가 선명하게 관측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반도체, 미래 자동차에 달렸다 삼성·SK도 전장시장 적극 공략

글로벌 반도체 시장 반등 해답은 자동차에 있었다. 국내 업계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다.

1일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전년비 18.6% 증가한 539억달러(약 61조원)를 기록했다.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13.7%)보다 훨씬 높다. 컴퓨터(15.5%), 통신용(15.2%), 정수소비용(14.6%) 등 성장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전체 매출 비중은 11.5%에 불과했다.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얘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이미 전장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바 있으며,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장 반도체를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엑시노스 오토는 삼성전자가 만든 전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 V9. /삼성전자

장 반도체 브랜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이미지 센서를 내놓았고, 앞으로 라인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독일 아우디에 엑시노스 오토 V9를 공급기로 계약을 끝냈다.

SK하이닉스도 2016년 오토모티브 전략팀을 수립하고 차량용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주력으로 전장 반도체에서도 주도권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재용 기자 juk@

日·中·중동·동남아 수출계약 1조 차질

>> 1면 '관절염 환자에...'서 계속

세포·유전자, 바이오까지 타격 우려

◆"안전성 문제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9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인보사 시술 건수가 크게 급증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사태로 큰 제동이 걸렸다. 더 큰 문제는 해외다. 인보사는 지난해 일본에 62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이뤄졌고, 중국 2300억원, 중동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다. 동남아 제약사들을 포함하면 약 1조원 이상의 수출 계약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이번 인보사 사태가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은 물론,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미칠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도 보건당국도 지난 15년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수 환자들에 실제로 투약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을 미친다"며 "잠단바이오법이 2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그래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태가 바이오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보사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포를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형질전환세포는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TGF-β1를 발현하기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연결세포이건 신장세포이건 치료제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코오롱생명과학 유수현 바이오사업 담당 상무는 "임상 단계와 상업 단계에서 사용된 세포가 달라졌다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를 고려하겠지만, 임상 전 과정에서 세포 변화가 없었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지난 11년간 3500건의 투약 사례에서 부작용은 102건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성도 입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성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신장유래 세포 대신 연골 세포가 애초부터 쓰였다고 할지라도 인보사가 더 큰 효과를 가졌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TC는 세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TGF-β1의 발현을 도운 후 2주면 체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세포의 유래가 다르다고 해서 치료제 유효성이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50억 이상 '고의적 회계위반' 과징금

금감원, 관련규정 시행세칙 개정 조치범위·대표이사 책임 등 강화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위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서면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신(新)의 감법과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규모 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면직) 권고 대상은 기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된다.

감사인의 경우 고의 위반행위를 하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한다.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외감규정에 회사 임원의 면직(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고 및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치기준에 반영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는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시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했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끝낸다. /안상미 기자